

W:WOOSUNG

2023년 10월

주간 축산 이슈

뉴스클리핑

10월 1주차 HOT ISSUE

- 축산 5대 과제, 국감 이슈화로 쏠린다
- AI 특방기간 가금류 방사 못한다

축산 5대 과제, 국감 이슈화로 푼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삼주·전국한우협회장)가 지난 4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를 향해 5개항의 축산업계 현안 해결과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축단협이 공식적으로 요구한 사항은 ▲TRQ(저율관세할당) 수입을 통한 축산물 수급 정책 개선 ▲축산 자조금 승인 지연 및 자율성 보장 개선 ▲사료값 상승에 따른 추가대책 마련 ▲전략작물(하계조사료) 직불 사업 지원 확대 ▲자연 재난에 따른 축산 재해대책 개선 등이다.

TRQ 수입 관련 문제는 물가안정이라는 이유로 정부가 주요 축산물에 대해 TRQ 수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물가안정 효과는 미미하며, 국내산 축산물 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은 매우 크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 수입 및 유통업체만 혜택을 본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하면서 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TRQ 수입 정책에 대해 전면 개선을 요구했다.

축산자조금 승인 지연 및 자율성 보장에 대해서는 정부가 자조금관리위원회 및 대의원 총회에서 승인된 사업계획을 승인단계에서 임의로 조정하고, 승인 시기도 지연하고 있어 정부가 시의적절한 운용관리 및 효율적 집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예산을 활용해야 할 영역에도 자조금을 활용하려 한다고 꼬집고, 자조금은 자율성 확보가 필수이며, 제출된 운용계획안에 대해 농식품부의 승인이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고 덧붙였다.

사료값 상승에 따른 중장기적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국제 곡물가격의 영향으로 사료가격 파동이 6~7년 주기로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사료안정기금 조성 등 사료가격 파동에 대비한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사료 생산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의 강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논 하계조사료가 쌀 생산소득 대비 경제성이 낮은 상황에서는 생산량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전략작물직불금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과 조사료 수확 장비 정부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상 기후로 인한 자연 재난이 잦아짐에 따른 재해대책 개선을 요구했다. 재난사업 복구를 위한 지원기준이 설정돼 있지만 산정 가격이 낮게 설정돼 있어 현실화가 필요하며, 그 외 사일리지, 톱밥, 사료 등의 영농자재를 추가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젊은 축산’ 육성, 농촌소멸 대안

농촌을 지키고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축산업을 육성, 진흥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현장의 축산인들 사이에서도 공감대가 확산되며 주목받고 있다.

실제 농촌에는 젊은 인력이 없어 농촌이 늙었다는 지적이 어제 오늘이 일이 아님에도 농촌을 젊고 활력 있게 육성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농촌을 지키고 활력 있게 하기 위해서는 축산업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어느 품목 보다는 식량안보 기능을 갖고 있는데다 농촌지역의 주소득원으로서 농촌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축산이 농촌에서 현금을 돌게 하는 농업 농촌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그 배경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후계농업경영인과 청년창업형후계농 육성자금을 융자 지원하면서 농촌 재구조화를 통한 축산 육성의 의지를 보이고는 있으나 막상 현실에 맞지 않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한 규제에 손발이 묶여 신규 유입은 고사하고 가업을 잇는 후계농마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축산업은 타 품목과 달리 가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후계자가 적지 않다. 그러나 이를 저해하는 요인이 너무 많다보니 아예 엄두도 내지 못하고 지레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현실을 직시, 정부에서는 가업 승계를 원하는 후계자에게는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주는 정책도 과감히 추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박규현 강원대 교수는 대학 교육에서부터 현실에 맞게 커리큘럼을 짜야 한다며 실제 현장에서 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조언한다.

이상철 한국축산경제연구원 부원장은 축산의 65세 고령화율이 6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노력 대비 소득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데다 지자체 조례에 의해 축사 규모화 및 현대화를 위한 어떤 시도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청년 유입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따라서 농촌을 지키고 축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의 제도를 청년농 유입 정책으로 완전히 개혁함으로써 정책의 일대 대전환을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현재와 같은 미봉책으로는 농촌 소멸의 위기는 곧 현실로 닥칠 것이라는 우려감은 더 커지고 있다.

검역본부 수의사 ‘공백’ 심각

“검역본부 마저…” ‘우리나라 대표 수의조직’ 농림축산검역본부도 수의사 구인난에 시름하고 있다.

수의사 결원과 공백이 깊어지며 당장 가축질병 방역, 검역, 연구, 축산물 위생, 동물보호, 동물약품 등 검역본부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장기적으로는 축산업 지속성장에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검역본부 총 정원은 1천154명이다. 결원은 87.5명(0.5명은 시간선택제). 총 정원 중 수의직 정원은 267명, 수의연구직 정원은 99명이다. 하지만 수의직의 경우 무려 47.5명, 수의연구직은 10명이 빈자리로 남아있다.

이러한 결원은 한 두해 전부터 벌어진 일이 아니다.

6년제 수의과대학 이후 하나둘 생겨나더니 지난 2016년 5월 김천으로 청사를 이전한 이후에는 부쩍 더 많아졌다. 결국 수의직 30~50명, 수의연구직 10명 등 수의사 부족 사태가 수년째 이어지게 됐다.

‘수의사 산실’이면서 견학 1순위 등 그렇게 자랑스러워 하던 검역본부를 왜 수의사들이 외면할까.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우선 사회전체적으로 위라벨을 선호하면서 지방(김천청사) 또는 전국을 돌게 되는 근무환경에 수의사들이 고개를 돌렸다.

최근에는 공무원 기피 현상이 더해졌다. 무엇보다 수의과대학에 원서를 낼 때부터 반려동물병원 진출을 고려한 수의사가 많다. 기본적으로 검역본부에 지원할 수의사 수가 적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검역본부 수의사 개개인 업무는 오히려 늘어났다.

예를 들어 악성가축질병이 발생하면 수의직은 물론, 수의연구직에게도 축산현장 방역 일이 맡겨지기 일쑤다. 돌아오면 본연의 업무가 가득 쌓여있다. 공항 검역관이 가축방역관으로 배치되는 것도 빈번하다.

급여는 많지 않다. 연금이 줄며 동물병원, 기업체와 급여격차가 벌어졌다. 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공무원보다 적다.

정책결정, 승진기회 등에서도 종종 뒷전으로 밀린다.

이러는 사이 위, 옆으로는 빠져나가고 아래에서는 수혈되지 않는 악순환 고리가 생겨났다. 임시방편으로 퇴직 수의사 공무원의 일선 현장 복귀가 추진될 정도다.

더 큰 걱정은 앞으로다. 신규 수의사가 유입되지 않은 채 향후 수의사들을 필요로 하는 새 정부 조직이 생겨날 경우, 현직 젊은 수의사를 중심으로 검역본부 이탈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수의업계는 물론, 축산업계에서도 그간 산업발전에 검역본부 수의사 공이 매우 컸다며 서둘러 수의사 충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검역본부는 근무 여건에 맞는 적절한 보수와 수당 등 처우개선과 장기적으로 수의직렬 공무원이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전문성 임무 부여 등 역할 강화를 제안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사실 보수를 더 많이 준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원인을 찾고 총체적으로 풀어가야 한다. 특히 수의사가 해야 할 일과 그렇지 않아도 되는 일을 구분해 수의사 업무를 덜어내고, 그 전문성도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자체 수의사 부족 문제는 더 심각하다. 20여명이나 수의사가 비어있는 시·도 지자체가 수도룩하다. 면접만으로 수의사를 뽑는 지자체도 많지만, 수의사 정원을 채우기에는 힘이 달린다. 공무원 뿐 아니다. 사료, 동물약품 등 민간기업에서는 수의사 신규 채용을 포기하고, 다른 인력을 통해 기존 수의사 업무를 대체하는 경우가 점점 일반화돼가고 있다.



**“한우 관련 모든 질문에
전문가가 직답한다”**

농협이 대한민국 대표 한우 플랫폼으로 만들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NH하나로목장’ 앱에서 한우 산업 전 분야에 걸쳐 각계 전문가에게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 안병우)는 ‘NH하나로목장’ 앱에 가입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무료상담 서비스를 신설했다고 9월 20일 밝혔다.

‘NH하나로목장’ 앱에서 ‘무료상담’란에 사양·개량·질병·축사 시설 등 한우와 관련된 궁금증이나 애로사항을 게시하면 박사, 의사 등 농협에서 선정한 각계 전문가가 답변을 달아주는 방식이다.

농협은 정부·지자체의 지원사업 조회, 씨수소 상세 정보 확인, 축산 관련 자료실 등 이용자 편의 기능도 추가해 한우 산업 종사자들이 ‘NH하나로목장’을 통해 목장이나 사업체 경영관리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안병우 농협 축산경제 대표는 “그동안 한우 산업 종사자들이 전문성 있는 정보를 얻기 어려웠다. NH하나로목장 앱의 무료상담 서비스를 통해 한우 산업 종사자들의 궁금증을 신속·정확하게 해소해 드리겠다”고 했다.

육우 송아지 애물단지로 전략

낙농가에서 필연적으로 생산되는 육우 송아지가 애물단지로 전략했다. 지난해부터 낙농가의 생산여건이 어려워지면서, 암수 막론하고 송아지 거래가 끊기자 오롯이 낙농가들이 품어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그나마 이달부터 원유가격 인상을 기점으로 낙농가의 생산 의지가 되살아나면서 암송아지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지만, 숫송아지 거래는 여전히 꽁꽁 얼어붙었다.

올해 태어난 숫송아지 전수를 목장에서 사육하고 있다는 경기도 이천시의 한 낙농가는 “사육밀도에 대한 부담이 적은 편이라 일단은 수용해서 사육하고 있지만, 사료비 등의 부담과 경제적인 압박이 크다”라면서 “수차례 거래를 시도했지만 수요가 없다는 이유에서 거절당해 어쩔수없이 사육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매일 우유를 생산하는 낙농가의 특성상 육우 비육을 함께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대부분의 낙농가들은 숫송아지가 태어나면 일주일 이내에 이를 거래하는 게 관행이다.

그는 “소값이 좋을 때는 몇만 원 이내의 가격을 받고 송아지를 실어 보내곤 했지만, 지난해부터는 유통상인 조차 농장에 발길을 끊었다”라면서 “소규모 농장일수록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더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농협이 실시하고 있는 산지 가격 조사에 따르면 올해 9월 젖소 수소 초유떼기 마리당 거래가격은 1만 원 수준이었다.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는 7~8만 원 선에 거래된 기록도 있지만, 정읍의 경우에는 지난해 12월, 영천은 올해 6월 이후 거래 기록이 전무하다.

농협 관계자는 “농협에서 19개 조합을 통해 매월 세 차례 가격 조사를 시행하고 평균가격을 공시하고 있다”라면서 “일부에서는 거래가 없어 가격 조사가 원활하지 않은 지역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국면이 장기화될 전망이 짙어지면서 낙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사료곡물 가격의 불안정한 정세와 환율 상승 등으로 인한 생산비 증가 여지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이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 낙농가는 “대부분 낙농가에서 생산되는 송아지는 평균적으로 암수 비율이 50:50이라고 하지만, 상황이 어려울 땐 애석하게도 숫송아지 비율이 더 높게 느껴진다”라면서 “낙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경제성을 높이하고자 수정란 이식을 하는 등 생존을 위한 차선택을 찾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올해 초 송아지가격 폭락 원인을 두 가지로 지목하면서 정부의 대책 수립을 촉구한바 있다. 협회는 우선 육우고기 도매가격 하락과 사료값 폭등으로 인한 육우 농가 사육 의지의 축소로 송아지 입식 포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군납 축소방침 등에 따라 소비가 위축되면서 지난해 12월 기준 육우고기 도매가격이 2021년 1월(1만1788원/kg) 대비 20.4% 폭락한 9387원/kg을 기록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또 정부가 추진 중인 낙농 대책에 따라 원유생산 기반이 축소되면서 암송아지 사육까지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FDA 식물성 대체음료 라벨링 지침 논란



미국서 식물성 대체음료에 대한 라벨링 지침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미국식품의약국(FDA)은 지난 2월 ‘우유 대체품에 대한 표기 지침 가이드’ 초안을 통해 식물성 대체음료에 대한 ‘우유’ 표기를 허용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다만, 식물성 대체음료의 원료에 대한 명확한 표현과 함께 우유와 영양성분이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표기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FDA는 업계로부터 900개 이상의 의견을 받았다.

낙농업계는 식물성 대체음료의 ‘우유’ 표기를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각 제품이 제공할 수 있는 영양 가치에 대해서 소비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이는 소비자들을 오인할 소지가 있는 라벨이 될 것이라며 FDA의 제안서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미국낙농업협회(DFA)는 FDA가 소비자 보호와 정직하고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모방 라벨링에 대한 기존 규정을 시행하거나 해당 제품에 대한 식별 기준을 수립할 준비가 되어 있지않는 한 유제품 용어 사용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식물성 대체음료 업계는 ‘우유’ 표기가 소비자 혼동을 야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찬성하는 한편, 영양성분 표기에 대해선 불만을 표명했다.

식물기반식품협회(PBFA)는 우유를 식물성 대체물로 대체해도 영양소 결핍이 증가하지 않을 것이며, 소비자들은 기존 규정에 의한 영양성분 표기를 통해서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FDA가 제안한 영양표기 문구 라벨링은 전통적 우유가 식물성 대체음료보다 건강하다는 주관적 해석을 담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를 오히려 혼란에 빠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강원도 화천 양돈농장서 ASF 발생

중수본, 발생농장 출입통제 ·
소독 · 살처분 등 긴급방역조치



강원도 화천군 소재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했다.

이번 ASF가 발생한 농장은 돼지 1천500여 마리를 사육 중에 있으며 9월 25일 상시예찰 정밀 검사에서 양성축 4마리가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외부인·가축·차량의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가용한 소독자원을 동원하여 화천군 소재 양돈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하고, 특히 화천군과 인접지역 5개 시군(철원·춘천·양구·포천·가평)에 대해서는 9월 26일(화) 0시부터 9월 27일(수) 24시까지 48시간 동안 양돈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이동제한 기간 중 집중 소독할 계획이다.

중수본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신속한 살처분, 정밀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이라며 “양돈농가에서는 농장 내·외부 소독, 방역복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돈협, 국정감사 현안 선정

국정감사 10일~24일 실시
협회, 양돈 현안 13개 마련
현안 질의 우수 의원 선정키로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가 국정감사 요구 사항 13가지 주요 현안을 선정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의 국정감사가 10월10일부터 농림축산식품부를 시작으로 열린다. 농해수위의 국정감사 중 축산 분야 기관 일정은 △10일=농림축산식품부 △13일=농협중앙회 △18일=농촌진흥청,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환경관리원 △24일=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 종합 감사 등으로 진행된다.

이에 한돈협회는 ‘2023년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한돈산업 발전과 개선을 위한 국정감사 농정 요구사항 13개 주요 현안을 선정하고, 국정 감사에 다뤄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협회가 선정한 13가지 현안은 △축산 자조금 자율성 보장 개선 △돈육 할당관세 효과 △축산 물아내는 농촌공간정비사업 문제 △축산 인력 이탈 우려되는 지역특화형 비자제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축소 △액비 최대 살포량 △폐사체 비료원료 포함 여부 △바이오가스 촉진법 실현 여부 △악취 처벌 지도 단속 △비료공정규격 내 음식물 건조 분말 혼입 관련 △야생멧돼지 ASF 확산 방지 대책 △동물복지 시행 문제점 등 이다.

이에 협회는 국정감사 기간 동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전체 국감활동을 모니터링, 한돈산업 발전에 공로가 있는 우수 의원을 심사하고, 선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AI 특방기간 가금류 방사 못한다

철새 매개 유입 위험성 고조
따라 법으로 못박아

명령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벌
금, 1년 이하 징역



가금농장 중 방사사육을 하는 농장(동물복지 사육, 토종닭 등)들에 주의가 요망된다. 방역당국이 겨울철 발생가능성이 높은 고병원성 AI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내년 2월까지를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특방기간)’으로 설정하고 가축전염병 방역관리를 강화했다. 특히 올 겨울철, 감염된 철새에 의해 고병원성 AI가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 농림축산식품부는 ▲철새 방역관리 ▲농장내 유입(바이러스)차단 ▲농장 간 수평전파 방지 등 3중 차단방역을 기본으로 위험수준에 비례하고 차등화된 방역관리를 비롯해 계열화업체 및 농장들의 책임 방역, 민간협업 등을 중점으로 방역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몇 년간의 통계를 토대로 AI 발생이 빨라지고 있는 추세라 이에 대응, 철새 도래 초기인 이달부터 주요 철새도래지 19개소의 조류 분변 등 검사를 확대하고, 과거 다발지역인 24개 시·군을 ‘AI 고위험 관리지역’으로 지정, 집중 관리하는 동시에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농가(1천920호)중에서도 발생 위험성이 큰 농가 692호를 별도로 선별하는 등 방역조치를 강화했다.

아울러 이번 겨울부터 농가의 가금입식 사전신고제도 강화되는데 주요 내용은 ▲현장점검을 통한 방역 미흡농가는 미흡사항을 보완 후 지자체에서 입식 허용 ▲농가(또는 계열화업체)는 가금 입식 7일 전까지 자체점검을 실시 및 방역실태 점검표 및 입식 사전 신고서를 관할 시·군에 제출 ▲출하시 AI 검사증명서(이동승인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 것 등이다.